

다산포럼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운용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기구로 설정되어 있었다. 기금운영위원회(20명 위원으로 구성)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정부 대표 4인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6명과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 전문가 2인 등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되어 왔다. 민주적 대표성이 비교적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어 온 이 기금운영위원회가 불행하게도 국민연금 관련 주요 의사 결정에서는 늘 보건복지부의 '들러리' 내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이유가 작용해 왔다.

제구실 못하는 위원들

우선 현재까지 기금운영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개별 위원에 안전을 상징·부의할 권한이 배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로 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가 기금운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원의 이론적·실무적 지원을 받아 기금운영위원회에 안전을 상징해 왔다. 대체로 기금운영위원회의 공식 회의가 1년에 6~7차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회의 시간은 두 시간 정도에 불과

했다.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각각 5분만 발언해도 최대 100분이 소요되는데 두 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내에 심도 있는 안전 검토와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기금운영위원회의 공식 회의에서 주요 안전을 제대로 심의하여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 심각한 사정은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들의 자질 및 전문적인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기금운영위원회 내에는 회의 출석률이 극도로 낮은 일부 정부 부처 위원들도 있지만, 안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생산적인 의제를 제기하기에는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직장 및 지역 가입자대표들이 적지 않다. 회의에 참석하긴 하지만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한 채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거나 나오는 위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10월 초 언론에 공개된 정부의 기금운영위원회 개혁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사무국도 없는 비정기 회의체에서 사무국을 갖춘 공식 상설기구로 승격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춘 위원에게 기존에는 부여되지 않았던 안전 제안권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대목이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 조건과 새로 부여된 책임과 권한이다. 지금까지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촉 민간 위원은 직장·지역 가입자 대표라면 충분했지만 새 개편안에서는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만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 제안권 새로 부여

이번 정부의 기금운영위원회 개편안은 만시지탄의 느낌과 함께 여전히 불안전하고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금운영위원회의 분래 기능과 위상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체계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인다. 민주적 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는 주요 직장 가입자 대표와 지역 가입자 대표들은 금융참가(financial participation) 내지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가 명실상부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금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필경 관료의 지배를 더 공고화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단에서



김진구
일신중 교감

'일미동' 학생들

용지가 벽면에 붙어 있었다. '일미동'은 '일신중 미술 동아리'의 약칭이다. 2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교 때부터 매년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벽화 작업을 하고 있다. 교정 곳곳에 있는 벽화는 우리 학교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이다.

허영재야, 사업가, 가로등 켜는 사람, 지리학자 등 어린왕자가 만난 지구의 사람들이 뜻밖의 '일미동' 중학생들의 손끝에서 되살아나 어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다. 이 벽화를 지나 출퇴근을 하면서 양귀자의 소설 '일미동 사람들'도 떠올랐다. 80년대 중반 서울에서 밀려난 주인공이 막 시로 승격한 부천시의 변두리 작은 마을 일미동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절망 속에서도 가늠하기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행복사건관 엄 씨, 강남 부동산 박 씨, 원미지불포 주 씨, 형제수퍼의 김 반장 등 각각의 소시민들이 어린왕자가 만난 소행성의 주인공처럼 그려져 있는 소설이다. 고달픈 삶이 북적북적 같은 문체로 쓰인 연작 소설이다.

일미동은 장미와 풍선과 노란별이 두 동실 떠있고, 원미동은 돈, 워선, 소외가 좁은 골목길에 회색빛 파스텔로 물들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세상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보아야 더 잘 보인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미동 학생들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진 동아리 회원들의 진로가 궁금했는데 한두 명 정도가 미술을 전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학창 시절 취미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 학생들이 먼 훗날 어른이 되어 붓 든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오늘 같은 가을날, 집 뜨락이나 아늑한 산자락에 캔버스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뒷 모습은 어떤가. 평안하지 않은가.

일미동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밑그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 이 학생들의 선택이 너무나 부러웠다. 만약 세월을 거슬러 중학생이 된다면 나도 이런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을까. 지금 어른들은 학생들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어린왕자처럼 맑게 자라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꿈을 키우고 있다. 오히려 문제는 어른들이다. 어른의 잣대로 재단하고, 상처를 주고, 휘청거리게 한다. 요즈음은 나라의 교육을 맡은 분들이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프루야구 해설가의 마음 아픈 사례가 있다. 그는 투수 출신으로 현역 프루야구 선수 때보다 이론과 사례 중심의 명확한 해설로 더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해설가가 고등학교 선수 시절

어느 날 칭찬을 듣고 싶어서 코치에게 "저도 000 선수와 같이 1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대답이 "너 같은 투수는 10분에 한 명씩 나온다."고 했다.

이 야구 해설가의 참담한 사연을 듣고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생각났다.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10년에 한 명 정도 나와야 좋을 것인데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1년에 한 명씩 나오게 생겼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년 남짓 만에 물러났다. 그는 취임사에서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 되묻지 않는 최선은 늘 위험하다.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취했던 교육 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소통'과 '여론'을 방자한 두리뭉실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출항했거나 '공론화'라 쓰고 '공염불'이라 읽는다는 비아냥만 남긴 채 좌초했다. 후임 교육부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1년짜리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큰 소리 치면서 장관은 일년소계다. 학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미동이나 학부모들이 이리저리 휘둘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고



김평수
전남도립대 경찰경호학과 교수

도로 위 공사 현장과 교통안전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은 주로 과속, 주시 태만, 안전 거리 미확보, 차량 결함, 졸음 운전, 음주, 운전 미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전자의 개별 행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절대적으로 운전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한 부분도 있다. 바로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또는 도로에 장애를 주는 공사장(건설 등)의 교통안전 문제"가 그것이다. 도로 공사의 유형으로는 대개 유지보수, 긴급 복구, 상하수도, 가스, 전기, 시설물 설치 공사 등이 있으며, 도로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는 대개 상가, 주택, 아파트, 산업단지 등 도로를 일정 부분 점유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통체증 유발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게 마련이지만,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가 더 큰 문제다.

비전문가의 잘못된 차량 유도 시설 및 유도 방식(공사 인부의 차량 유도, 아르바이트 인력의 유도, 공사 관련자의 유도 등)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는 경찰(의무경찰 포함), 경찰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모범운전자, 헌병, 소방공무원)에 국한하고 있어 반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행위들은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통한 자격이 있는 사람의 교통 유도 및 통제 업무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제도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관련법 신설 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2년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통 유도 업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사회 안전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일찍이 '교통 통제관'을 제도권의 도로 시스템에 편제시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고 교통 혼잡 비용 절감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의 경우 교통 혼잡 비용(시간 가치, 인건비, 보험료, 연료비 등)은 약 4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국방비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로 교통 혼잡 비용만 줄여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점용 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 현장은 주변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보행자와 차량의 불편을 증가시킨다. 또 교통사고 위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통 지체 또한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통 유도 업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체계적인 도로 시스템의 제도권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무산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건립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광주에 투자의 향서를 제출한 현대자동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완성차 광주 공장 설립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면서 이제 시민운동으로 변질까지 했다. 특히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등이 불참 이유로 내놓은 연봉에 대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노동계의 협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선 광주 지역 직업계 고교 열세 곳의 취업부장들과 학부모들은 "새 일자리를 만드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은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우리 학생을 비롯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 고향을 떠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제 앞서 공장단 역시 호소문을 내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풀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광주 지역 208개 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와 노인회 광주시연합회도 내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주시가 노동계와 대타협을 통해 현대차 투자 유치를 꼭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대차 광주 공장 설립은 10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10월이 지나면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벌써 10월도 중순을 훌쩍 넘기고 있다. 골든타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노동계 협력이 절실하다.

광주시 또한 이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리 어떻게 했기에 또 시험문제 유출인가

목표의 한 사업고에서 최근 실시된 중간고사 시험 문제 일부가 학생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사고가 터지면서 대책 자체가 공염불이 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시험지 유출은 지난 2일 오후 학교 별관 자습실에서 공부하던 2학년 학생이 바로 옆 교사연구실 컴퓨터에서 영어 문제 원안을 출력하면서 이뤄졌다. 이 학교는 과목을 담당하는 복수의 교사가 공동으로 출제하고 교차 검증을 하는데 당시 영어 교사는 컴퓨터와 연결된 외장 하드에 문제 11개를 저장해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머칠 후 치러진 시험에서는 유출된 원안 문제 11개 가운데 10개가 그대로 출제됐고 해당 학생은 이전 시험보다 20점 가량 오른 9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시험 문제 보안에

실패한 교육 당국의 사후 대처도 허술했다. 지난 6일 유출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이날 학교로부터 유출 사실을 받은 전남도교육청도 경찰이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10일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광주 사업고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험지 유출 사태가 잇따르자 출제부터 시험까지 단계별 보안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시험 문제가 원안 검토 단계에서 유출됐다는 점에서 대책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례다.

일선 고교의 시험지 유출은 드러난 것만 지난 2014년 이후 13건에 달한다. 수시와 학생부 전형의 근간을 이루는 시험이 이처럼 부정으로 얼룩지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시험지 관리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보완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국경일이다. 1926년 음력 9월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다. 음력 9월29일을 한글날로 정한 것은 '세종실록' (世宗實錄) 28년 (1446) 9월조의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是月訓民正音成)라고 한 기록을 근거로 한다.

'가갸'이라 한 것은 당시에는 '한글'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한글을 '가갸겨겨.....' 하는 식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한글날'로 이름이 바뀐 것은 1928년이다.

1931년 이후에는 그동안 음력으로 기념해 오던 한글날을 양력으로 고쳐 10월29일 또는 10월28일에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다가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인지가 쓴 서문에 '정통 11년 9월 상한' (正統 十一年 九月 上澣)이란 기록이 나온 것이다. 이를 근거로 1945년 광복 후 10월9일을 한글날로 정하게 됐다. '정통 11년 9월 상한'의 '9월 상한'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로 잡은 뒤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과학적 원리와 우수성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애민 정신이 깃든 문자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여야 정치권도 지난 주 한글날을 맞아 대부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기렸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한글을 너무 푸대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바른미래당 김수현 원내대변인의 논평이 눈에 확 들어왔다. "영어나 외국어를 잘 해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외국어에 적힌 물건이나 소지품 하나쯤 들고서 꼭 남들과 구별돼야 살아남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다." "적어도 한글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사대주의 늪에 빠져 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한류가 유행한다 해도 일상에서 한글에 대한 인식이나 대접은 부끄러운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과거 식민지 시절 일본은 '국어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 민족의 정신과 얼을 없애려 했던 그러한 만행을 우리 스스로 저지르고 있음을 반성한다"고도 했다. 구구절절 말은 말이다.

/*박지성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배달 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에ditor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